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0 - 16 (3호)
안전유형	보고

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(안)

2020. 9. 23.



관계부처 합동

차 례

1. 추진 배경 및 경과	1
2. 근절대책 추진 성과 및 보완 방향	2
3. 향후 중점 추진 과제	2
[참조] 과제별 추진 일정	6
[참조] 전국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결과	7

I. 추진 배경 및 경과

- (추진배경) '18년부터 사회 전반에서 지속된 미투 운동이 초·중·고,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되고,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
 - ☞ 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 필요
- (추진경과) 피해자 보호·지원, 가해자 엄중 처벌, 예방 교육 및 인권·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현황 점검

18-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

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
근절대책 마련(18.12.21.)



19-9차 사회관계장관회의

근절대책 추진현황 및
향후계획 점검(19.6.28.)



20-4차 사회관계장관회의

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
근절대책 마련(20.4.24.)

II. 근절대책 추진 성과 및 보완 방향

- (실태조사 실시) 중 고등학생 성희롱·성폭력 실태(19.12월) 및 디지털 성폭력 실태(19.5월), 대학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(19.12월)를 통해 피해 현황 파악
 - ☞ 최근 성폭력 유형(그룹링, 불법촬영·유포 등)을 반영한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실태조사,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전문성 제고 필요
- (신고·대응체계 강화) 교육부 신고센터 설치(18.3월~), 교육청 전담조직(10개 청) 및 사안처리지원단(모든 교육청) 설치, 담당자 연수,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·배포
 - ☞ 사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체계 개선, 학교 내 성고충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 필요
- (징계 내실화) 성비위 교원 징계 제도 정비, 징계 투명성·형평성 제고
 - 사립교원 징계 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준용, 관할청 징계 요구 시 사립학교의 이행 의무화, 국공립교원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지, 징계위원 성비 기준 설정, 성희롱 인정 범위 확대
 - ☞ 사립교원 징계 제도 정비, 성범죄 예비교원 제재,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강화 필요
- (예방교육 강화) (예비)교원 교육·연수 중 예방교육 포함, 교육자료 개발·보급 및 국립대학 평가 시 예방교육실적 반영,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배포
 - ☞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·자료 지속 개발·보급 필요
- (양성평등문화 확산) 학교 양성평등 진단기준 개정·보급 및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,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·확산
 - ☞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위한 교원연수 및 교육자료 지속 개발·보급 필요

Ⅲ. 향후 중점 추진 과제

1. 초·중등 분야 사안 대응 및 성인지 교육 강화

□ 디지털 성폭력 현황 파악 및 전담조직 설치 확대

- (전수조사 실시) 전국 초·중등 학생 디지털 성폭력 전수조사(학교폭력 실태조사, '20.9~10월)를 통해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
 -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또래 문화·인식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(~'20.12월)
- (대응체계 강화) 시도교육청 내 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·인력 등 전담조직 운영 지원
 - 학교 내 성고충 업무담당자 대상, 사안처리 절차 중심의 교육·모의실습을 통해 성희롱·성폭력 사안 대응 역량 강화

□ 성인지 교육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

- (교원 성인지교육 강화) 교원 연수기관 내 자격·직무교육 등에서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과정 지속 강화
 - (예비교원)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교·사대 재학 중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이수하도록 「교원자격검정령」 개정(~'20.12월)
 - (현직교원) 교원 자격연수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 직무연수 운영 시, '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'을 포함('20.10월~)
- (학교현장 지원) 부처간 협력을 통해 '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'(1,000회) 및 '성인권 교육'(200개교) 추진(~'20.12, 여가부 협조)
 - ※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소규모학교 중심 전문강사 교육 지원
 - 시도교육청별 현장지원단 연수 교사를 학교현장 자문 컨설팅단으로 활용('20.하~)
- (학교 양성평등교육 확산) 양성평등 교육목표·성취기준 개발, 양성평등학교 운영가이드·수업사례집 개발(~'20.12) 및 개별학교에 보급
 - 양성평등 연구학교(4개교/초2,중2)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('20~'22.)

2. 대학 성희롱·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

□ 전담기구 역량 강화

- (전담기구 설치 의무화) 대학 내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학 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
 - * 「고등교육법」 및 시행령 개정(20.9.~)을 통해 조직·인력 구성, 역할 규정
- 전담기구 운영규정 표준안 개발·배포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절차,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(21년~)
- (운영현황 파악) 매년 대학 내 성고충 전담기구 운영 현황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*(19.~)를 통해 전담기구 개선 필요사항 파악
 - * (조사 내용) 전담기구 인력, 예산, 조직 현황, 사건 접수·처리 현황 등
- (맞춤형 역량교육 실시) 성고충 전담기구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교육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역량 분석 및 직무연수과정 표준안 개발·운영(20.하~),
 - 담당자 연수·자문·컨설팅을 상시 제공하여 사안대응 역량 강화(20.~)

□ 양성평등문화 조성 지원

- (우수사례 확산)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우수사례 공모전(19.~)을 통해 대학별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 사례 발굴·확산(~21.상)
 - ※ (예) '19년 사례) 성인지 감수성 주제 연극 제작·공연(진주교대), 불법촬영 학생점검단 구성·운영(한서대), 성문화 축제(폭력예방·성인식개선) 개최(선문대)
- (예방교육 자료 보급) 외국인 교원·학생 대상* 맞춤형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·보급(20년~)
 - * 국문·영문으로 개발한 교원·학생 교육자료를 중국·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비영어권 교원·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 확대

3. 신고체계 내실화 및 가해자 후속조치 강화

□ 신고체계 강화 및 신고자 보호

- (신고체계 내실화) 교육부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체계화*,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 및 사안 대응(재조사 요구, 직권조사 등) 내실화
 - 다수의 가·피해자가 발생했거나, 중대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지역 경찰관서와 협조(경찰청 협조)
- * 운영 규정(처리 절차, 사안처리 적정성 판단 기준, 직권조사 방법 등) 마련('~20.하)
- (신고자 보호·지원) 성희롱·성폭력 신고자는 신변보호·치료비 지원 등으로 적극 보호하고, 신고자 신분 유출 불이익 조치 발생 시 엄정 대처*(권익위)
 - 신고자 색출 금지, 피신고자의 고소(명예훼손 등)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(권익위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, '20.하~)

□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강화

- (징계 강화) 성비위 사립교원에 대한 국공립교원 수준의 징계를 위해, 사립교원 징계양정 중 '강등'을 신설하고,
 -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징계 결과를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
- ※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('20.7.14. 박찬대 의원 발의)
- (신속한 분리조치) 교원이 아동·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경우, 학생·학교와의 조속한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*
- ** 「교육공무원법」 개정 추진('20.7.23. 권인숙 의원 발의)
- (교원 자격 취득 제한)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을 교원자격 취득 제한 요건으로 규정하여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
- *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중등교육법」 개정 추진 ('20.6.8. 서영교 의원 발의)

4. 디지털 성폭력(불법촬영카메라) 점검·신고 체계 구축

- (상시점검체계 구축)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초·중등 및 대학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연간 불시점검 정례화(연 2회 이상)
 - ※ 필요한 경우 기관 협조(합동점검 등)를 통해 점검 실시(경찰청, 행안부 협조)
-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·중등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(외부기관 위탁 등) 지원
 - ※ '20.7.~8.에 실시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결과는 [붙임] 참조
- 교육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탐지장비 구입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(☞ 경남), 불법촬영 예방 조례(☞ 인천) 등 자체 계획을 수립·추진

《 참조 :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주요 내용》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상시점검체계 운영(반기별 1회 이상) | ○ 불법촬영카메라 신고체계 마련 |
| ○ 기관별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관리자 지정 및 정기 교육 실시 | ○ 지자체, 경찰관서 협업체계 구축 |
| | ○ 불법촬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 |

- (전문기관 연계)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신고가 교육부·교육청 내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우, 관계기관(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) 연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삭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제공
- 각급학교의 학생·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방법 및 신고체계(교육부·교육청 신고센터 등) 안내자료 제작·배포(~'20.10월)
 - ※ 불법촬영 엄중처벌 경고(징계·처벌 등), 피해 유형(카메라 설치 장소 등) 안내 및 주의 요청, 피해 대응 방법 안내(불법촬영 취약시설(화장실, 탈의실 등) 내 부착)

참고**과제별 추진일정**

추진과제	관련부처	추진 시기
① 초·중등 분야 사안 대응 및 성인지 교육 강화		
1. 디지털 성폭력 현황 파악 및 전담조직 설치 확대	교육부	~'20.4/4
2. 성인지 교육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	교육부	'20.4/4~
② 대학 성희롱·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		
1. 전담기구 역량 강화	교육부	'20.4/4 ~
2. 양성평등문화 조성 지원	교육부	'20.4/4~
③ 신고체계 내실화 및 가해자 후속조치 강화		
1. 신고체계 강화 및 신고자 보호	교육부 권익위	'20.3/4~
2.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강화	교육부	'20.3/4~
④ 디지털 성폭력(불법촬영카메라) 점검·신고 체계 구축		
1. 상시점검체계 구축	교육부, 경찰청 행정안전부	'20.4/4~
2. 전문기관 연계	교육부 여성가족부	'20.4/4~

□ **추진 배경 및 경과**

- (배경)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사건으로 학교 내 불안감 확산
 - ☞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**전체 학교 대상 점검 및 점검 체계 구축**을 위한 현황 자료(보유 장비, 점검 주기) 조사 필요
 - (점검 실시) 초·중·고·대학 내 불법촬영카메라 **전수점검 실시 요청**(’20. 7~8)
 -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방식 및 주기, 탐지 장비 보유 현황 등 조사
 - 기 보급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* 활용 및 지자체·경찰관서 협조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, 적발 시 후속조치*를 실시하도록 요청
- * ’18년 ‘화장실 불법촬영 근절대책’에 따라 모든 교육(지원)청에 장비 보급(594대)

□ **점검 주요 결과**

- (의의) 학교현장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점검 **현황**(점검 방식, 장비 현황) **파악** 및 **점검체계 구축 필요성** 확인
- (점검 결과)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, 점검 **현황**(장비 현황 등) **파악** 및 **점검체계 구축 필요성** 확인
 - (교육청) 총 1,803대의 탐지 장비 보유(교육지원청 863대, 개별학교 874대 등), 15개 교육청은 연 1~4회의 정기 점검 실시(1개 교육청은 전문기관 위탁)
 - (대학) 총 324대의 탐지 장비 보유(105개 대학), 155개 대학*이 연 1회~주 단위의 정기점검 실시(62개 대학은 경찰관서·지자체·학생단체와 합동 점검)

<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체계 현황(’20.9월 기준) >

분류	초·중·고등학교				대학
정기 점검 실시 기관	15개 교육청				187개 대학
정기 점검 방식	자체 점검(14개 교육청) 전문기관 위탁(1개 교육청)				자체장비 활용, 전문기관 위탁, 공공기관·학생단체 합동(64개교)
정기 점검 주기	연 1회(9개청), 연 2회(5개청), 연 4회(1개청)				연 1회(52개교), 연 2회(56개교), 연 3회(2개교), 연 4회 이상(45개교)
탐지장비 보유 대수	교육청	교육지원청	학교	총계	총 382대 보유(147개 대학이 보유)
	66대	863대	874대	1,803대	

붙임

**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
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(안) 상세 내용**

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(안)

2020. 9.



관계부처 합동

차 례

1. 추진 배경 및 경과 1
2. 근절대책 추진 성과 및 보완 방향 2
3. 향후 중점 추진 과제 8
4.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12

1 추진 배경 및 경과

□ 추진 배경

- '18년 상반기부터 공공부문 및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서 지속된 미투 운동이 중·고등학교,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
 - 피해자 보호·지원, 가해자 엄중 처벌, 예방 교육 및 인권·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('18.12) 및 이행현황 점검('19.6) 실시
-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,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 대책 필요성 증가

☞ 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 필요

□ 추진 경과

- (근절대책 마련)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장 적합성 높은 근절대책 마련
 - 학생·교사·전문가 등 현장 간담회,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'18.4월~'20.4월, 27회 개최), 시·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
 - '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' 발표('18.12.21.,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)
- (근절대책 이행) 범정부 협의체 및 시·도교육청 협의체를 통해 이행점검
 - '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' 발표('19.6.28.,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)
 - 여가부·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협의체(여성가족부 주관)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(18회, '19~'20.8.)
 - 시·도교육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, 교육부-교육청 협의체를 개최하여 과제 추진상황 이행 점검(7회, '19~'20.8.)
- (디지털 성범죄 근절)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에 따라, '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' 발표('20.4월,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)
 - 가·피해 학생 후속조치, 맞춤형 예방교육, 실태조사 실시(가·피해 현황 조사, 청소년 문화인식 조사) 등 디지털성범죄 현황 파악·예방·근절 등 종합적 대책 마련

[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]

- 6대 핵심 영역, 19개 추진 과제로 구성 -

핵심 영역	주요 추진 과제
① 성희롱·성폭력 실태파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중·고등학교 대상 실태조사 ② 대학 대상 실태조사
② 피해자 보호 및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기능 강화 ② 초·중등학교 성희롱·성폭력 사안처리 체계구축 및 컨설팅 강화 ③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④ 초·중등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보호 강화 ⑤ 청소년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 ⑥ 대학 성희롱·성폭력 대응체계 강화
③ 가해교원 징계 및 재발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 및 이행 강화 ② 징계 결과의 피해자 통지 ③ 가해교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·상담 의무화 ④ 성비위 대학 교원에 대한 연구비 제한
④ 예방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예비·현직교원 등 대상 예방교육 의무화 ②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·보급 ③ 대학 예방교육 실적 등 기관평가 연계
⑤ 양성평등문화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초·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강화 ②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내 교육적인 해결 유도
⑥ 범정부 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범정부 협의체 등 활용 강화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

1 성희롱·성폭력 실태 파악

- ❖ 중·고등학생 대상 성희롱·성폭력,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완료
- ❖ 대학 성고충 상담 전담기구 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완료
 - ▷ 최근 실태(디지털 성범죄 등)를 반영한 성희롱·성폭력 실태조사 필요
 - ▷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전문성 제고 필요

- (초중등) 중·고등학교 내 성희롱·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피해 현황 파악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두 차례('19. 4월 및 12월)의 실태조사 실시
- (대학) 대학별 성희롱·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「대학 성 고충 상담 전담기구 실태조사」 실시('19.12월)

《 성희롱·성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》

① 「중고등학교 양성평등의식 및 성희롱·성폭력 실태조사」 ('19.12월)

조사 대상	전국 중·고등학생(14만여명), 교원(3만여명)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
조사 내용	성희롱·성폭력 유형별 피해 여부·경로, 예방교육 만족도, 양성평등의식
주요 결과	① 30% 내외의 학생이 성차별·성희롱 피해를 경험 ② 적지 않은 비중의 성폭력 피해 발생 : 강제추행(4.9%), 성폭행(0.8%) ③ 남·여 학생 간에 양성평등의식 격차(10%p 내외)가 크게 나타남

② 「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」('19.5월)

조사 대상	전국 중고등학교 학생(4만여명)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
조사 내용	디지털 성폭력 유형별 파·가해 경험, 예방교육 만족도, 성역할 의식
주요 결과	① 44.6%의 학생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희롱을 경험 ②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·협박 피해 경험율 : 1% 내외

③ 「대학 성 고충 상담 전담기구 실태조사」 ('19.12월)

조사 대상	전국 대학 내 성고충 상담 전담기구 담당자(186개교 응답)
조사 내용	전담기구 운영 현황, 사건 처리 현황, 예방교육 운영 현황
주요 결과	(운영 현황) 전담인력 부족(1.9명), 높은 비정규직 비율(72.1%), 낮은 경력(3.9년), 높은 타 직무 겸직 비율(79.2%) 등 인적 여건 보완 필요 (예방교육) 대규모 교육위주(98.8%)의 운영으로, 학생의 교육 시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, 효율적인 예방교육 운영 필요

2 피해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

- ❖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, 중대·심각 사안 조사 실시
- ❖ 교육청 내 전담조직(20.9월 기준 10개청) 및 사안처리지원단(全 교육청) 설치, 성고충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·컨설팅 실시, 사안처리매뉴얼 개정·보급
 - ▷ 교육부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의 체계적 운영 필요
 - ▷ 학교 내 성고충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 필요

- (신고 활성화) 학교 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운영('18.3월~)
 - 실명 및 익명 신고 접수·처리*, 중대·심각하거나 학교 측 은폐 우려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** 실시

* '18.3.9.~'20.9.9.기준 330건 접수(492건 중 단순질의 등 162건 제외) : 초중등 175, 대학 155

유형별	(교원→학생) 161건		(교원→교원) 55건		(학생→학생) 51건		(학생→교원) 2건		(학생·교원외) 49건		
분기별	'18.1/4	'18.2/4	'18.3/4	'18.4/4	'19.1/4	'19.2/4	'19.3/4	'19.4/4	'20.1/4	'20.2/4	'20.3/4
		29건	38건	15건	24건	19건	45건	33건	37건	38건	26건

**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 성비위 특별조사 실시 및 해임 요구('19.7~8월)

- (초·중등 대응체계 구축) 교육청 내 성희롱·성폭력 사안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,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사업 실시
 - (조직 구성) 교육청 내 성희롱·성폭력 통합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(10개 교육청*), 교육(지원)청별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·운영 지원('19~,특교)
 - * ('19.6월) 5개 교육청 → ('20.8월) 10개 교육청(서울·경기·인천·광주·울산·경남·경북·부산·대구·대전)
 - (역량강화 지원) 사안처리 자문·컨설팅 지원, 전문가·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'학교 내 성희롱·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*' 개정 및 보급('20.9월)

< 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운영 우수사례 [인천교육청] >

- 성희롱·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·전문가 인력풀 운영
 - (사안처리지원단) 성 사안 전문가(변호사·노무사·상담사)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성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파견, 사안처리 지원
 - (성인식개선시민모니터링단) 교육청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제출
- 가피해 학생지원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성인지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(3개 기관)
 - 가해 학생(2개 기관) 및 피해 학생(1개 기관) 교육을 위한 위탁기관 운영→ 정규 교육과정 외 성인지 감수성 교육, 준법 교육, 관계개선교육 실시

- (대학분야 대응체계 강화) 대학 성고충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「대학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」 운영('19년~)
 - 교육자료 개발, 전담기구 담당자 직무연수, 사안처리 전문가 자문·컨설팅 등 대학 내 성희롱·성폭력 전담기구 역량 강화* 실시
 - * ('19년 실적) 대학 내 전담기구 실태조사, 예방교육·연수자료(8종) 개발·보급,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(7회, 592명), 전문가 자문·컨설팅 지원(88개교) 실시

3 가해교원 징계·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 강화

- ❖ 사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 강화, 관할청의 징계 요구 이행 의무 강화
- ❖ 성비위 교원 대상 징계의 투명성(결과 통지) 및 형평성(징계위 구성) 제고
- ❖ 성희롱 정의 규정 변경을 통해 성희롱 인정 범위 확대
 - ▷ 사립학교 교원 징계 체계 강화 지속 필요
 - ▷ 최근 성비위 추세를 반영,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제도 정비 필요
 - ▷ 성범죄를 저지른 예비교원에 대한 교직 배제 필요

- (징계 기준 강화) 사립교원 징계 시 국공립교원의 징계 기준을 준용* 하고,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대한 사립학교의 이행 의무화**
 - * 「사립학교법」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제·개정('19.10. 시행)
 - ** 「사립학교법」 개정('19.3. 시행) : 관할청 징계요구 이행 의무화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- (투명성·형평성 제고) 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 개정을 통해 교원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,
 - 성비위 관련 징계위 구성 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위원을 1/3 이상 위촉하여 징계 형평성 제고
- (성희롱 정의 변경) 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 상 성희롱의 정의 규정을 변경*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하도록 개선
 - * (기존:국가인권위원회법)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
 - ⇒ (변경:양성평등기본법)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
4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강화

- ❖ 교원(예비교원) 예방교육 내실화, 교육자료 보급 및 예방교육 체계 강화
- ❖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

▷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등을 반영한 교육자료 지속 개발·보급 필요

- (교원 예방교육 내실화) 현직교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* 중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역량 강화 교육 포함('18년~)
 - * 교(원)장·교(원)감·수석교사·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개정('19.4.1. 시행)
 - 예비교원 교육과정에 '아동·청소년 성범죄예방', '양성평등교육' 등 개설·운영 권고('19.2), 양성기관 평가 시 예방교육 지표 반영('19.4)
- (예방교육자료 개발·보급) 대학 교육대상자별 맞춤형* 예방교육 자료 (4종, 학생·교원·외국인학생·교원) 개발·배포(교육부 홈페이지 게재)
 - * (학생용) 대학 내 월별 주요 행사(신입생OT, 축제 등) 시 활용 가능한 교육 주제 (교원용)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대응 단계별 교원의 역할 제시
- (대학평가 예방교육 실적 연계) 국립대학 양성평등 실적 평가 시 성희롱·성폭력 전담기구 운영, 예방교육 실적 등 지표 반영('18.8~)
 - 4대 폭력 예방교육* 실적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('19.10)
 - * 성폭력·성희롱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(각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)
- (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)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요령 콘텐츠 제공 (20.3.)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* 안내자료 배포 완료('20.4.)
 -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(예방수칙, 카드뉴스, 동영상 등) 배포 및 사이버폭력 예방주간(6월 3주)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 실시
 - * 유포 사진 삭제 및 법률·의료 지원, 상담 등 종합적 지원 제공(여성인권진흥원)
- (미디어 리터러시 교육)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위한 정보윤리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·학습자료* 개발('20.5~) 및 학부모 원격연수**('20.5~) 운영
 - * 교과 연계형 서책자료 2종 및 영상자료 1종
 - ** (내용)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특성, 학생 연령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 등

5 양성평등문화 확산

❖ 학교 양성평등 기반 조성 및 교수·학습자료 보급

❖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및 연구학교 운영·우수사례 확산

▷ 현장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자료 보급 지속 필요

- (양성평등 진단지표) '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'를 개정·배포*하고, 교육청 및 학교 단위 활용 독려('19.2~)
 - * '양성평등한 학교문화와 인프라', '체계적 양성평등 교육 운영', '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' 3개 영역 15개 세부 지표로 구성('15년 지표 개정)
- (교수·학습자료) 양성평등 교육 지도서 및 범교과 교수학습자료를 초·중·고별 총 6종 개발·배포('19년)
- (교원 현장지원단 양성) 학교 양성평등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직교원 대상 '양성평등 현장지원단' 양성 연수* 실시('19~20)
 - * 19년(7~8월) 170명(인권-양성평등 공동), '20년(8월) 200명 연수 실시
- (연구학교 운영) 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, 양성평등교육 공간 조성, 교원 학습공동체, 가정·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등('19년 3개교, '20년 4개교 운영)

6 범정부 협력 내용

- (범정부 협의체 참여)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('20년, 2회), 여성폭력 방지위원회('20년~, 2회), 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('18~'19년, 8회) 등을 통해 근절대책 이행상황 점검
- (근절대책 수립) N번방 등 심각한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에 따라 관계부처와 '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' 수립(4.23., 국정현안조정회의),
 - 가·피해 학생 후속조치, 맞춤형 예방교육,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된 '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'(4.24., 사회관계장관회의) 별도 수립·추진

〈 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향후 추진 과제 〉

<p>성희롱·성폭력 실태조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초·중·고 학생 디지털 성폭력 실태 및 문화·인식 조사 실시 ▷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운영 실태조사 및 업무담당자 역량 분석을 통한 직무교육 표준안 개발
<p>신고 및 대응 체계 내실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교육부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대응역량 강화 ▷ 성희롱·성폭력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및 보호 범위 확대 추진 ▷ 초·중·등 학교 성고충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▷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규정 표준안 개발·배포, 전담기구설치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추진
<p>가해자 후속조치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아동·청소년 성범죄 관련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▷ 사립교원 징계제도 정비(징계양정 신설, 징계결과 피해자 공개) ▷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 교원의 교원 자격 취득 제한
<p>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내실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(예비)교원 대상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▷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 실시, 양성평등 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▷ 대상별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, 양성평등교육 우수사례(양성평등 연구학교) 확산
<p>디지털 성폭력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학교별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구축 (최소 연 2회 이상, 불시 점검 실시) ▷ 디지털 성폭력 신고 접수 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고 사안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내실화

① 성희롱·성폭력 실태조사 확대

- (초·중·등 실태조사)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피·가해 경험 실태 조사 및 학생 문화·인식에 대한 심층연구 실시
 - (피·가해 현황 조사) 디지털 성폭력 피·가해 경험 여부, 유형, 피해 경로 파악을 통해 정책 개선방향 도출(학교폭력실태조사, '20.9~10월)
 - (인식 조사)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청소년의 인식 및 놀이 문화를 이해하고, 의식 개선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 근절 방안 연구('20.8~12)
- (대학 현황조사) 성희롱·성폭력 전담기구 실태 조사*를 통해 운영 현황 파악, 업무담당자 역량 분석을 통해 직무교육 표준안 개발('20.하~)
 - * (조사 내용) 성고충 전담기구 인력·예산·조직 현황,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

② 신고체계 및 사안대응 체계 내실화

- (신고센터 체계화) 신고센터 운영 규정* 마련(~'20.하), 전담인력(공무직) 확보 등을 통해 교육부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체계화,
 - * (주요 내용) 공익신고자 보호, 비실명대리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, 사안 처리 절차 사안처리 적정성 및 개입여부 판단 요건, 직권조사 절차, 방법 등
 - 신고접수 사안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개입(재조사 요구, 직권조사 등)
 - 다수의 가·피해자가 발생했거나, 중대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지역 경찰관서와 협조(경찰청 협조)
- (신고자 보호) 성희롱·성폭력 신고자는 신변보호·치료비 지원 등으로 적극 보호하고, 신고자 신분 유출 및 불이익 조치 발생 시 엄정 대처*(권익위)
 - * 신분 유출 및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고발, 징계요구, 원상회복 조치 등
 - 신고자 색출 금지, 피신고자의 고소(명예훼손 등)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(권익위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, '20.하~)
- (초·중·등 대응체계 강화) 교육(지원)청 내 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력·예산 지원*을 제공하고,
 - 성고충 업무담당자 대상 사안처리 절차 중심의 교육·실습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
 - * 특별교부금 지원('19.~'21.), '21년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반영 추진
- (대학 대응체계 강화) 성고충 전담기구 운영규정 표준안 개발·배포 ('21.~), 전담기구 설치·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(고등교육법 개정)

③ 성희롱·성폭력 가해자 후속조치 강화

- (교원 징계 강화) 성비위 교원 대상 신속한 분리조치, 사립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및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 추진
 - (분리조치 강화) 교원이 아동·청소년 성범죄,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경우, 학생·학교와의 조속한 분리를 위한 직위해제 근거 마련
 - * 관련 「교육공무원법」 개정 추진(20.7.23. 권인숙 의원 발의)
 - (사립교원 징계 강화) 사립교원 징계 양정(강등) 신설 및 성비위 사유로 징계 시 피해자에게 징계결과 통보를 의무화
 - * 관련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(20.7.14. 박찬대 의원 발의)
- (교원자격 제한)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을 교원자격 취득 제한 요건으로 규정하여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
 - * 관련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 추진(20.6.8. 서영교 의원 발의)

④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내실화

- (교원교육 강화) 교원 연수기관 내 자격·직무교육 등에서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과정 지속 강화
 -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(연1회)하도록 「교원자격검정령」 개정
 - * 교원양성기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라인·표준교육안 보급(20.하)
 - ** 교원자격검정령 [별표1]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반영(20.8~9월 입법예고)
 - 교원 자격연수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 직무연수 운영 시, '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교원 연수기관에 요청(20.10.)
- (학교현장 지원) 부처간 협력을 통한 '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'(1,000개교) 및 '성인권 교육'(200개교) 추진(~'20.12, 여가부 협조)
 - ※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소규모학교 중심 전문강사 교육 지원
 - 시도교육청별 현장지원단 연수 교사를 학교현장 자문·컨설팅단으로 활용(20.하~)
- (대학 예방교육 강화) 외국인 교원·학생 대상* 맞춤형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·보급(20년~)
 - * 국문·영문으로 개발한 교원·학생 교육자료를 중국·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비영어권 교원·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 확대

- (학교 양성평등교육 확산) 양성평등 교육목표·성취기준 개발, 양성평등학교 운영가이드·수업사례집 개발(~'20.12) 및 개별학교에 보급
- 양성평등 연구학교(4개교/초2,중2)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('20~'22.)

5 디지털 성폭력(불법촬영카메라) 점검·신고 체계 구축

- (상시점검체계 구축)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초·중등 및 대학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연간 불시점검 정례화(연 2회 이상)
 - 초·중등학교 및 교육(지원)청, 대학별 자체 자원 활용(보유 장비 활용·전문기관 위탁 등) 및 공공기관 협의를 통해 점검 실시
 - ※ 기관 자체 보유 탐지장비 활용, 전문기관 위탁 등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 시 기관 간 협조(합동점검 등)를 통해 점검 실시(경찰청, 행안부 협조)
 -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·중등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(외부기관 위탁 등) 지원
 - ※ '20.7.~8.에 실시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결과는 [붙임] 참조
 - 교육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탐지장비 구입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(☞ 경남), 불법촬영 예방 조례(☞ 인천) 등 자체 계획을 수립·추진

《 참조 :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주요 내용》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상시점검체계 운영(반기별 1회 이상) | ○ 불법촬영카메라 신고체계 마련 |
| ○ 기관별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관리자 지정 및 정기 교육 실시 | ○ 지자체, 경찰관서 협업체계 구축 |
| | ○ 불법촬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 |

- (신속한 후속 조치)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적발 시 신속한 수사기관 신고 및 가해자 엄중 징계 조치로 교육환경 안전성 확보
- (신고체계 정비) 교육부·교육청 신고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신고 접수 시, 전문기관(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) 연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삭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제공
 - 각급학교의 학생·교원을 대상으로 교육부, 교육청 신고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물 제작·배포(~'20.10월)
 - ※ 불법촬영 엄중처벌 경고(징계처벌 등), 피해 유형(카메라 설치 장소 등) 안내 및 주의 요청, 피해 대응 방법 안내(불법촬영 취약시설(화장실, 탈의실 등) 내 부착)

4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

□ 현장 의견 청취 및 과제 이행 점검 (연중)

- 교육청, 학교,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과제 발굴과 자문위원회* 및 범정부 협의체** 등을 통한 과제별 이행상황 지속 점검 실시
 - * 남녀평등교육심의회, ** 여성폭력방지위원회, 사회관계장관회의 등

□ 과제별 관련 부처 및 추진 시기 (연중)

추진과제	관련부처	추진 시기
① 성희롱·성폭력 실태조사 확대		
1. 초·중·고등학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전수조사, 인식·문화연구	교육부	~'20.4/4
2.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역량분석	교육부	~'20.4/4
② 신고 및 대응 체계 내실화		
1. 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	교육부 권익위	~'20.4/4
2. 초·중·고등학교 성고충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강화	교육부	'21.1/4~
3.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규정 표준안 개발·배포, 성고충 전담기구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	교육부	'20.4/4~
4. 신고자 적극 보호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	권익위	'20.4/4~
③ 가해자 후속조치 강화		
1. 가해교원 직위해제 요건 완화, 사립교원 징계제도 정비	교육부	'20.3/4~
2. 성범죄 예비교원 교원자격 취득 제한	교육부	'20.3/4~
④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내실화		
1. (예비)교원 대상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	교육부	'20.4/4~
2.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	교육부 여성가족부	'20.4/4~
3.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·활용	교육부	'20.4/4~
⑤ 디지털 성폭력(불법촬영카메라) 점검·신고 체계 구축		
1.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체계 구축	교육부, 경찰청 행정안전부	'20.4/4~
2. 디지털 성폭력 관련 신고체계 정비	교육부 여성가족부	'20.4/4~

□ **추진 배경 및 경과**

- (배경)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사건으로 학교 내 불안감 확산
 - ☞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**전체 학교 대상 점검 및 점검 체계 구축**을 위한 현황 자료(보유 장비, 점검 주기) 조사 필요
 - (점검 실시) 초·중·고·대학 내 불법촬영카메라 **전수점검 실시 요청**(’20. 7~8)
 -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방식 및 주기, 탐지 장비 보유 현황 등 조사
 - 기 보급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* 활용 및 지자체·경찰관서 협조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, 적발 시 후속조치*를 실시하도록 요청
- * ’18년 ’화장실 불법촬영 근절대책’에 따라 모든 교육(지원)청에 장비 보급(594대)

□ **점검 주요 결과**

- (의의) 학교현장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점검 **현황**(점검 방식, 장비 현황) **파악** 및 **점검체계 구축 필요성** 확인
- (점검 결과)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, 점검 **현황**(장비 현황 등) **파악** 및 **점검체계 구축 필요성** 확인
 - (교육청) 총 1,803대의 탐지 장비 보유(교육지원청 863대, 개별학교 874대 등), 15개 교육청은 연 1~4회의 정기 점검 실시(1개 교육청은 전문기관 위탁)
 - (대학) 총 324대의 탐지 장비 보유(105개 대학), 155개 대학*이 연 1회~주 단위의 정기점검 실시(62개 대학은 경찰관서·지자체·학생단체와 합동 점검)

<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체계 현황(’20.9월 기준) >

분류	초·중·고등학교				대학
정기 점검 실시 기관	15개 교육청				187개 대학
정기 점검 방식	자체 점검(14개 교육청) 전문기관 위탁(1개 교육청)				자체장비 활용, 전문기관 위탁, 공공기관·학생단체 합동(64개교)
정기 점검 주기	연 1회(9개청), 연 2회(5개청), 연 4회(1개청)				연 1회(52개교), 연 2회(56개교), 연 3회(2개교), 연 4회 이상(45개교)
탐지장비 보유 대수	교육청	교육지원청	학교	총계	총 382대 보유(147개 대학이 보유)
	66대	863대	874대	1,803대	